▶▶ 매일 INDEX

4면
전북대 '학생타운' 개관식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음 10월 15일) 제3872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국가예산 10조원 시대' 개막… 전북발전 새출발

전북자치도, 내년도 국비 총 10조834억원 확정
전년비 8000억원 이상 증액… 역대 최대 규모
신공항 포함 새만금 SOC 확충 · AI 등 반영돼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준병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명연 · 장연국 전북자치도의원 등이 손을 맞잡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마침내 국가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박희승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전북 국가예산이 총 10조83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000억 원 이상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김 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이 드디어 예산 10조원의 문턱을 넘었다"며, 이번 성과가 단순한 수치 확대가 아니라 전북의 산업 지형과 미래 전략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 예산 삭감과 대형 SOC 사업 종료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염원과 정치권의 헌신이 더해져 난관을 뚫어냈다고 강조했다.

예산 확보 과정은 쉽지 않았다. 김 지사는 "한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는 연속적인 위기였다"고 회상하며, 그때마다 도민들의 간절한 기대와 전북이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절박함이 행정과 정치권을 하나로 묶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와 14개 시 · 군, 지역 정치권은 국회 예산 심사 전 과정을 함께 챙기며 완벽한 '원팀'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예산은 새만금 SOC 확충, AI · 로봇 및 첨단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로 미래 산업 기반 구축,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실현과 농생명 K-컬쳐 거점, 도민 삶의 질 개선을 비롯해 문화 · 체육 · 관광 인프라 조성, 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반영됐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1,200억원의 예산을 삭감 없이 지켜내며, 글로벌 거점도시로의 본격적인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 시설농업 로봇 실증기반 구축, 우주 방사선 영향 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등 첨단 미래산업의 핵심 사업들도 새롭게 반영되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새만금 햄프 산업 클러스터와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가 신규 반영되며, 전통 산업에 미래 기술을 결합하는 동력이 마련됐다.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복합스포츠타운,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등 문화 · 관광 인프라 구축 예산도 확보돼, 전북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 경쟁력 강화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이와 함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숙원사업 예산도 신규 반영되면서 삶의 질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이날 총평에서 "전북이 지난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변화의 흐름 위에 서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전북 예산이 다시 우선순위로 올라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희승 의원 역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매 순간이 치열했다며, "예결위원으로서 한명도 예산결산심사위원장과 함께 전북 미래산업의 핵심 기반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관영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이번 예산 확보는 도민의 열망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업의 실행 속도와 도민의 삶에서 느끼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시군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예산의 집행 속도를 올리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예산 10조 원 시대 개막은 오랜 소외를 견뎌온 도민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안겨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전북이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을 확보했다는 상징적 선언이며, 전북 발전의 새 100년을 여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장수군 등 도내 현안예산 확보 쾌거

민주 이원택 의원, 국회 막판 심의과정서 추가로 확보
"AI · 재생에너지 기반 새 경제체제 선도 전북 조성에 최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 · 김제 · 부안을)이 도내 현안사업인 새만금과 장수군 지역을 비롯한 국비확보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그는 국회 막판 심의과정에서 김제와 부안,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반영을 빌롯한 새만금 등의 현안관련 예산 3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이원택 의원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첫 국가예산 국회 심의단계에서 △시설농업 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첨단정밀육종 기반구축사업 △가력항 국가어항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을 비롯해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반영 등 도내 주요 농업예산을 증액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김제 · 부안 · 새만금 지역 10개 핵심사업과 4개 도내 관련 주요 농업예산이 증액 반영되는 등 모두 306억원의 국비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액 · 확보된 사업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1조553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김제 · 부안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AI 시대 지역개발의 청사진을 그릴 신규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이번 국회 단계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한 전북관련 주요 농업정책 사업 4건이 총 203억원 규모로 증액됐다.

청년농업인 연구개발(R&D) 기술창업 사업과 민관협력 농촌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을 국회 단계에서 되살렸다는 점에서 매우 큰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장수군이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진안군이 선정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전북이 농어촌 기본소득 광역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콩 수매 등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 2만 톤 증액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며 "향후 논콩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북의 오랜 숙원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AI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선도하는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도내 두 번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 '장수'

순창에 이어 추가 선정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736억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장수군이 추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관련기사 9면〉

이로써 도내에서는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까지 총 2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확정됐다. 장수군은 1차 공모에서 전국 49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의 후보지에 포함됐으나, 순창군 등 7개 시범지역에 포함되지 못해 최종 선정에서는 탈락한 바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다. 특히 인구 유출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경제적 선순환을 유도하고,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수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군 전체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총 사업비는 736억원이며, 이 중 국비는 296억원이다. 지급 대상은 실제 거주 중인 모든 주민이다.

도는 순창군과 장수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의 도입은 단순한 금전 지급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 정착률을 높이며,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유도는 자영업자 소득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